

# 한국의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에 따른 재외국민들의 투표성향 연구: 미국 LA지역 거주 한인회를 중심으로

박찬용(김영진 국회의원실, 전남대 디아스포라학과)

1. 서론
2. 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이론적 접근
3. 재외국민 투표성향 분석을 위한 조사
4. 결론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지난 2009년 2월 대한민국 국회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재외국민 참정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한국은 해외에 약 700만명의 재외동포가 살고있고 그중 약 300만명(영주권자 145만, 해외주재원,유학생등 일반체류자 155만)의 재외국민이 한국의 각종선거에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중 19세 이상 유권자는 240여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약 70%가 넘는 재외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 17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새로 탄생할 예정이다)(중앙일보 2009,4.17).

1987년 대선에서 1,2위간 표차가 평균 203만여 표 차이가 있었고 2007년말 대선에서는 1,2위간 표차가 531만여 표였다. 그리고 2002년 16대 대선7는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57만여 표차로 이겼다. 1997년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는 불과 39만여 표였다.

재외국민 투표가 총선에 미칠 영향도 크다. 선관위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할 선거구도 신청하기에 따라 바꿀 수 있다. 한편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129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성남 수정구가 있을 정도로 치열한 총선판에서 결정적 변수가 될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보면 향후 재외국민들의 투표가 대선과 총선 등의 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줄 수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외국의 예에서 이탈리아는 재외국민 투표가 다수당을 결정한 사례가 있다. 이탈리아는 2006년 총선부터 재외국민의 투표를 허용했다. 세계를 유럽과 북.중미,남미,아시아,아프리카,중동등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인구수에 따라 하원 12석과 상원 6석을 배정했다. 그 결과 국내 상원 투표에선 중도좌파 154석, 중도우파 155석이였지만 중도좌파가 재외국민 투표에서 4석을 얻어 다수당이 되었다.

일본은 2000년 6월 중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했지만, 2006년부터는 지역구 중,참의원 선거와 보궐선거,재선거 참여까지 가능해졌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율이 낮아 선거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05년 중의원 선거때는 유권자 72만여명의 3%정도가 투표했다.

본 연구는 재외국민 참정권 허용이 그동안 소외받아온 해외동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동포들을 하나의 한민족네트워크로 묶어내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허용이 대한민국의 미래선거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할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들의 참정권문제와 향후 실제 재외국민들이 투표시 예상되는 투표성향을 지역주의 차원에서 알아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현재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 정도로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이 정당등의 각종 자료와 국회도서관, 기타 대학 도서관의 각종 논문자료, 그리고 한국정치학회등의 기존 문헌을 참고 하겠다.

세부적인 연구의 방법은 미국 LA지역의 재외동포들을 상대로 약 500여명을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 하겠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인구통계변수, 응답자의 투표참여여부, 지지하는 정당, 정치관심도 등을 검증하고 지역주의 성향이 투표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하겠다.

재외동포들의 투표 성향은 응답자의 인구통계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의 검증을 위해 통계프로그램인 SPSS/PC 17.0을 사용하여 독립표본 T-검증(independent sample T-test),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사후분석(Duncan),교차분석(Crosstab)등을 수행한다.

## II.재외국민 투표에 관한 이론적 접근

### 1.유권자의 투표 이론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고전적인 사회학자들은 유권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그의 정치적 선호와 투표행위를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본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특수성을 전제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개별 유권자의 선택과 정치행위가 인구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회집단적 기초(social group basis)에 근거한다고 일관되게 지적한다.(Lazarsfeld, Berelson, & Gaudet, 1968(1944); Berelson, Lazarsfeld, & Mcphee, 1954; Katz & Lazarsfeld, 1955) 이들의 설명에서 2단계 정보흐름(two-step flow of information)과 사회집단의 정치적 동질성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여기서 2단계 정보흐름이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매스 미디어에 의해 직접적으로 설득 되는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관계들, 이를테면 가족,친구,직장동료 속의 비공식적인 여론 주도층을 따른다는 것이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여론 주도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모호한 느낌을 확실한 방향으로 구체화시키고 강화시키게 된다. 한국 정치에서 국회의원이 법률입안이나 정책개발과 같은 의정활동보다 경조사 챙기기 같은데 더 신경을 쓰며, 여전히 발로뛰는 선거운동방식이 유효한 상황을 감안 한다면 매스 미디어의 정보가 사회적 관계를 경유하여 개인에게 도달한다는 논의는 상당히 현실에 부합한다. 한편 정치적 동질성이란 동일한 사회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동일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내집단 투표(in-group voting)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가족, 교회, 스포츠클럽과 같이 동일한 사회집단에 속해 있는 경우에 발견될 뿐만 아니라, 설령 같은 집단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공통의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상호간의 접촉을 통해서 비슷하게 투표할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설명이 갖는 통찰력은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고립되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사회집단을 통한 사회적 행위로 설명되는데 있다. 그러나 사회적 특성이 정치적 선호를 결정한다고 함으로써 투표행위를 단순히 개인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속성의 함수로 설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회적 특성이 사회집단이나 범주를 형성해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이나 관계등을 볼수 없다는 분석적인 한계를 초래한다.

이런 한계는 개인의 속성(attribute)이 아니라 개인간의 관계성(relational property)에 주목하는 연결망 이론에 의해 상당히 해소되는데, 일상에서 타인들과의 접촉으로 형성·유지되는 사회적 관계가 투표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근거해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을 내린다. 유권자는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친구,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므로 유권자의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연결망이 투표에 동원된다는 점을 중시한다.(Huckfeldt, 1979; Huckfeldt & Sprague, 1987, 1991 ; Huckfeldt, Beck, Dalton & Levine, 1995) 그런데 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성향과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망은 해당 선거를 위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일상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유권자의 태도와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망은 정치적으로 유관한 사회연결망(politically relevant social network)인것이다(weatherford, 1982: 123). 연결망 이론도 고전적인 사회학적 설명과 마찬가지로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동질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결망이 정치적으로 동질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정치적 선호와 위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정치적 토론을 더 많이 벌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연결망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정치적 태도와 의견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져서 특정정당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선호와 지지를 보이고 다른정당은 지지하지 않게 된다.(Laumann, 1973; Weatherford, 1982; Knock, 1990b; Zuckerman, Valentino & Zuckerman, 1994) 이처럼 정치적 동질성은 개인들 사이에 “강화적인 연대”(reinforcing tie)를 형성하여 개인으로 하여금 집단의 정치적인 태도와 행위에 공유하여 동조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사회자본 논의와 밀접하게 닿아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선행연구와 분석틀

### 1)선행연구(조사)

그동안 일반적으로 재외동포사회의 국내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수 있다. 이민의 역사가 20세기 초와 20세기 후반으로 나누어 볼수 있을 만큼 단절과 격차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포사회의 생성과 성장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 났는데,기존 동포사회의 구성원 변화와 더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에 대한 보다 공교하고 세밀한 준비의 필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내용을 보여주는 결과가 재외동포 해외부재자 투표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윤인진,이철우,김제완 2007, 52-68) 재미동포 중 재외동포 참정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사를 가진 로스앤젤레스와 뉴욕교포 각 300명을 표본추출하여 전화조사와 우편조사를 통해 시행한 설문조사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나타난 여러 표를 분석해보면 제

17대 대선에서의 후보자별 득표율이나 이데올로기적 성향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보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2008.12.16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정치권에서 재외동포 관련 조사로 한나라당의 조원진 의원이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동포의식 조사 보고서”를 낸적이 있다.(폴리시앤리서치, 2008. 8. 29) 이 보고서는 재외국민의 참정권 관련 범위와 재외동포의 권익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정책에 대한 평가,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의 추진과 재외동포의 권익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기획 되었다.

이 조사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로서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600명이 그대상 이었고 표본추출방법은 거주국별 성, 연령별 임의할당추출법 이었다. 이조사 에서 응답자의 46.5%는 한국 국적만 가지고 있으며, 다음으로 38.2%는 영주권과 한국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15.3%는 외국국적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참여경험은 모국이나 체류국을 불문하고 응답자의 73.8 %가 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반면에 국내 선거 경험율은 16%, 체류국 선거 경험율은 10.2%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이 참정권을 행사할 경우 예상되는 긍정,부정적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73.5%가 긍정적인 효과가 클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효과가 클것이다는 10.1%, 비슷하다는 11.6%, 잘모르겠다는 4.8%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하여 국내 선거와 똑같이 해야한다와 해외특성을 고려하여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응답자의 63.7%는 해외특성을 고려하여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국내 선거와 똑같이 하여야 한다는 26%, 모르겠다는 10.3%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방향은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정착하도록 하는것 인데, 이에 응답자의 38.7%는 거주국에서 정착도 중요하지만 한민족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우선성을 꼽았으며, 대체로 옳은 방향(34.2%),매우 옳은 방향(23%),잘 모름(4.1%)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재 재외동포에 대해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 및 정책적 고려에 대해 응답자의 83.3%가 미약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많다는 1.3%,적정 4.3%, 잘모름 11% 등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으로 응답자의 40.8%가 거주국에서의 사건,사고 등에 대한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거주국 정착에 도움이 될 네트워크 등 정보제공 29.7%, 한글교육, 한민족문화행사 등 민족정체성 부분 24.5% 기타 5%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외동포재단의 역할과 사업에 대한 인식을 보면 응답자의 57.2%가 보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38%이며 잘하고 있다는 4.8%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재외동포 재단의 역할과 사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응답자의 44.7%가 재외동포 재단의 전문성 부족을 우선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다음은 외교통상부 산하기관이라서 사업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약을 받기 때문 17.5%, 재외동포재단의 예산부족 9.6%,재외동포재단의 존재 자체를 모름이 9.6%순으로 나타났다.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현 체제를 개혁한다면 응답자의 30.8%가 독립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그 산하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주로 꼽고 있으며, 현행 재외동포재단의 위상과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27.5%,대통령 또는 총리 소속의 독립된 재외동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산하에 집행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방안 16.2%, 재외동포재단을 외교부에서 분리하여 재외동포 담당 특임장관이 재단이사장을 겸직하게 하는 방안 9.3%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일보에서는 지난 2009년 4월 17일자 신문에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한 각종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도 하였다. 미국,일본,중국,프랑스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1220명을 대상으로 투표성향 등을 설문조사했다. 그 결과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한나라당이 458명(37.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민주당 191명(15.7%) 친박연대(5.4%) 민주노동당(3.4%) 자유선진당(2.2%) 창조한국당(0.7%)의 순이었다.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앞섰지만 미국,일본에서 압도적이었고 중국.홍콩에서는 차이가 적었다. 대선 등에서 후보를 선택할때는 소속정당(7.3%)이나 지연(1.7%)보다는 능력(55.7%)과 도덕성(30.3%)등 개인자질을 훨씬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37.7%, 보수 25.7%, 중도 35.8%였다. 재외국민 10명중 8명이 “투표에 참가하겠다,” 6명은 매일 인터넷 등으로 한국 뉴스를 접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 정치나 상황에 대해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내에서의 정당별 지지도와 동질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 되었다.

## 2) 연구의 분석틀

선거에서 유권자는 어느 한 사람의 후보를 고르게 되지만, 이러한 선택이 단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로 그치는 것만은 아니다. 유권자의 투표행위는 본질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선택과 더불어 후보를 공천하고 정권을 획득하며 자신의 정치적 강령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정당 중 하나에 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구학계에서 유권자의 투표과정을 통해 정당 및 후보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정당일체감’이다. 이 개념은 1950년대 초에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조사연구소(Survey Research Center) 팀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정당일체감을 중추적인 독립변수로 고려해 유권자 투표행태를 설명하려는 분석을 미시간 모형(Michigan model)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미시간 학파 이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중 하나로 지적되어 온 정당일체감이란 무엇일까? 정당일체감은 특정한 유형의 ‘당파적 태도’로서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 기간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애착심 또는 귀속의식”을 의미한다. 정당일체감이 지닌 선거적 효용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가 정치적 쟁점(issue)에 대한 입장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둘째,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 셋째,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선거의 안정성과 정당의 제도화에 기여한다. 넷째, 세련된 정치의식을 지니지 못한 유권자에게 비용이 가장 덜 들면서도 분명한 판단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선거과정에서 쟁점, 정책, 인물 등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쉽게 투표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이다.

이러한 효용성과 더불어 정당일체감은 투표 선택에서 직접적인 효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유권자가 정책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립하거나 정당 및 후보자의 입장을 인지하는데 영향을 미침으로써 투표 선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박찬욱, 1993)

미시간 학파는 선거결과가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사

회학적 접근법이 착안하고 있는 정적(static)인 집단의 개념을 동적(dynamic)인 투표 결정 과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매개변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시간 학파가 고안한 개념은 ‘정당 일체감’ 또는 ‘정당소속감’으로서 집단에의 소속이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며, 정당일체감이 투표 선택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이 설명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인지 과정은 유권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정보의 내용보다는 정보 대상에 대한 기존의 심리적 선호도에 입각해 그것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정한다는 것이다.

특정 정당에 대해 장기적으로 지니는 심리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시간 학파의 논의는 1940년대 컬럼비아 학파의 연구에서 유래한다. 이들에 따르면 선거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유권자가 새로운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잠재하고 있던 정치적 성향(political predisposition)을 활성화 하거나 이에 근거한 애초의 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Lazarsfeld, Berelson and Gauder, 1944; 김장수, 2005b: 148).

미시간 학파는 받는 것이 아니라 투표와 관련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간주 했다.

정당 일체감을 투표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궁극적인 원인으로 간주하는 미시간 학파의 입장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 까지 진행된 일련의 연구를 통해 확립되었으며, 1960년에 출간된 『미국 유권자(The American Voter)』를 통해 집약되었다. 1960년에 선거 연구를 주도한 미시간 학파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때나 후보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인지적 요인의 역할과 이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일련의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미시간 학파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보통 18세 이전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으로 정의되고, 이후 성장 과정에서 시기가 지남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가 세지고 안정적으로 공고화 된다는 것이다.

정당일체감은 다른 인지적 투표 결정 요인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 가장 중요한 궁극적 단일 투표 결정 요인으로 정립되었다. 즉, 정당일체감은 자체적으로 다른 인지적 결정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그 형성과정에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추동되지 않는 추동자’로 규정되었다.(Green and Palmquist, 1990; 김장수, 2007)

미시간 학파는 특정 정당에 대한 심리적 귀속감으로 정의된 정당일체감이 유권자가 투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증명했다. 미시간 학파에 따르면 선거를 앞두고 제공되는 일체의 정보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에 근거한 선택적 취득, 즉 유권자가 지지정당에 대한 심리적 일체감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유권자의 인지적 투표 결정요인을 지지 정당에 편향되도록 형성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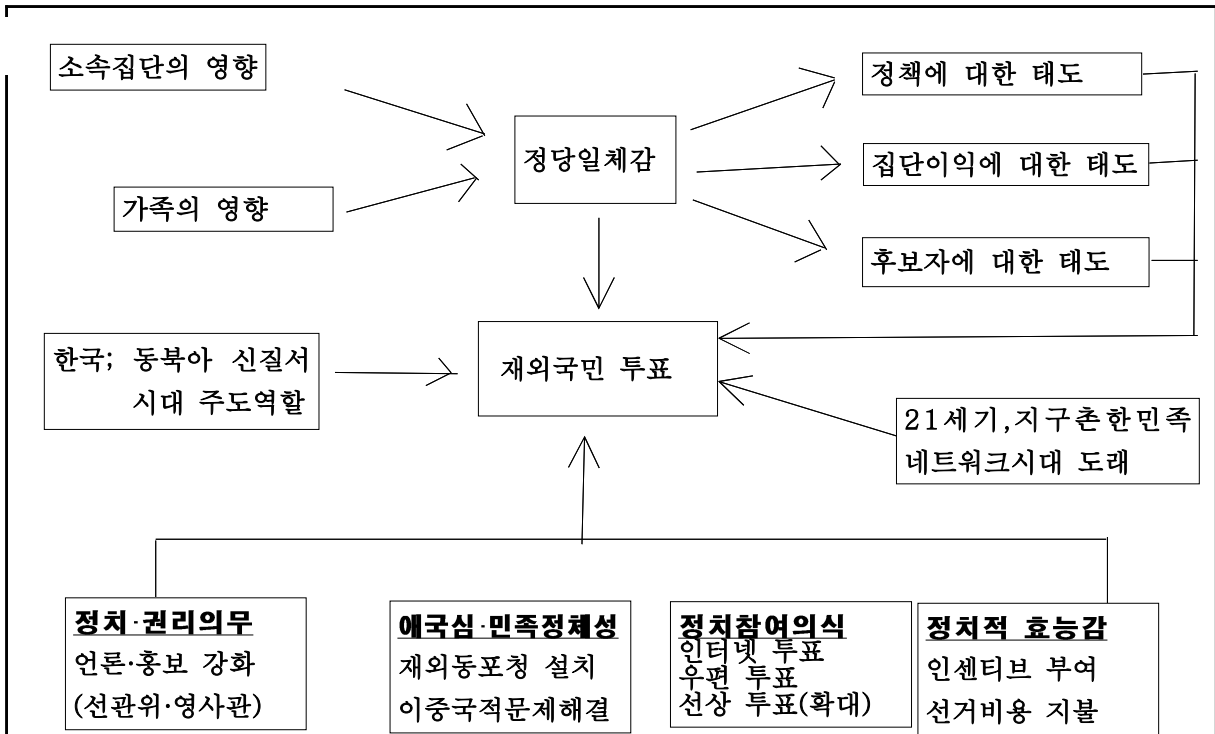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유권자는 자신이 귀속감을 느끼는 특정정당 후보에게 투표한다. 이에

따라 미시간 학파는 정당일체감을 “개인의 주변 환경 속에서 중요한 집단 대상(즉, 정당)에 대해 갖게 되는 감정적 정향”으로 정의하면서 “정당은 개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도의 차이를 지질 수는 있지만, 유권자가 일체감을 가는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정당은 인식이나 평가, 투표 및 다른 정치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귀속감을 지니게 하는 주요한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미시간 학파가 주장하는 사회심리적 측면의 정당성향인 정당일체감은 특정 정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유권자의 심리적 귀속감으로 해석되었으며, 미국 정치체제에서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 되었다, 미시간 학파는 장기적 정당일체감을 투표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가정할 뿐만 아니라, 투표 결정을 위한 단기적 태도, 즉 후보나 정책쟁점, 집단이익 등에 대한 유권자의 긍정적·부정적·평가와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Campbell, Converse, Miller and screen)로 작용함으로써 정당 지지자는 자신의 지지 정향에 부합하거나 일치하는 것에 관심의 초점을 맞춘다고 주장한다. 즉, 인식의 선별 기제로서 정당일체감은 과거의 정치사회적 경험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며, 이후의 정치적 대상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갖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당 지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해 되도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반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황아란, 1998)

정당일체감은 정당에 대한 심리적 밀착감, 편향성 등 다분히 감정적인 변수이며, 유권자의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합리성’과는 거리가 멀다. 미시간 학파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정치에 입문하기 이전인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서 전수받으며, 정치 문화를 습득하고 내면화 하는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적 변수는 성인이 되어 정치적 대상을 인지하거나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당일체감에 의한 투표는 인물이나 정책 분위의 투표에 비해 다소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투표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재외국민들의 투표성향 분석틀**



### III. 재외국민 투표성향 분석을 위한 조사

#### 1. 조사배경 및 조사개요 및 특성

##### 1) 조사배경

국회는 지난 2009년 2월 본회의를 열어 19세 이상 유학생, 현지상사 직원 등 단기 해외 체류자는 물론,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해외 영주권자에게까지 전면적으로 참정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일괄 가결하였다.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애국심을 고취하고 모국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하는 등 한국 정치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본 조사는 재외국민의 정치관심도 및 투표성향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조사분석하여 대한민국의 정치발전 및 향후 실시될 재외국민 참정권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 2) 조사개요

재외국민 투표성향과 관련한 본 여론조사는 미국 LA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한인 5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법을 통하여 2009년 3월 13일(금)부터 3월 27일(금)까지 15일 동안 실시되었다. 조사 대상은 미국 LA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배포한 후 조사의 목적과 의의에 대해 충



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응답자에게 문항의 이해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를 위해 사전에 조사원을 교육하고 설문지에 대한 검토와 토론을 거침으로써 조사 시 측정오류를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조사가 되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은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인지도 관련 문항과 대선 및 총선 투표 관련 문항, 대한민국 정치에 관한 문항 등 총 11개 항목과 응답자의 특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통계 패키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와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I-1> 조사의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미국 LA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재외 동포
조사지역	미국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지역
유효표본수	520표본
표본추출방법	체계적 표본추출(systematic sampling) 방법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조사방법	전화면접조사
조사기간	2009년 3월 13일(금) ~ 3월 27일(금)

### 3)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재외동포 투표성향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조사 대상에서 남자는 68.1%, 여자는 31.9%로 남성의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50대가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0대 27.9%, 30대 19.8%, 60세 이상 11.7%, 20대 6.7%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최종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57.7%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18.7%, 대학원 졸업 10.4%, 전문대학 졸업 8.3%, 중학교 졸업 3.8%, 초등학교 졸업 1.2%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이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무/관리/전문직 23.7%, 판매/서비스직 12.1%, 기능/노무직 10.4%, 기타 7.1%, 가정주부 4.4%로 나타났으며, 학생과 무직의 구성비는 각각 4.0%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종교별 특성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5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가 없다는 응답자가 24.2%, 기타 9.0%, 불교 8.5%, 유교 1.0%, 민족종교 0.8%, 이슬람교 0.4% 순으로 나타났다.

## 2. 조사분석결과

### 1) 빈도분석 결과